# 다크투어 명소 기대했는데…5·18역사공원 조성 '하세월'

##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공간 재탄생 2년 넘게 지지부진
## 폐유 오염토 또 발견 공사 스톱…추가 발견 땐 설계 변경해야
## 건축도면도 확보 못해 건물 리모델링시 사적지 훼손 우려 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505보안부대 옛터를 역사체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5·18역사공원' 공사가 2년 넘게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도중 옛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아직도 구체적인 오염구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또 지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505보안부대의 당시 건축도면을 확보하지 못해 건물 리모델링시 사적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의 차질까지 발생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쌍촌동 505보안부대 옛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4월까지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 부지를 조성한 뒤, 2024년까지 56억원을 들여 505보안부대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역사체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공원 부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에 개방됐으나 아직 공중화장실과 보도블럭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완성 상태다. 지난해 4월 역사공원 준공 직전 505보안부대 보일러실이 있던 곳, 주차장 계단 인근 등 2곳에서 군부대 폐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공사가 멈춰버린 것이다.

두 지점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농도의 기름이 검출됐다. 공원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흙 1㎏당 500㎎을 넘는 오염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데, 두 지점에서는 흙 1㎏당 적게는 3000㎎, 많게는 6000㎎의 기름이 섞여 있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10월부터 국방부 주도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화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작업 중 추가 오염토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바닥나자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단(타절준공)하고 남은 역사공원 조성 작업은 별도로 시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일러실 쪽에서만 400여㎥(약 700여 t) 흙을 파냈으며 이번 주 중 추가 오염토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 오염토가 발견되면 역사공원 조성공사 설계 변경부터 다시 해야 해 그만큼 역사공원 공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5·18역사공원 일대가 폐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퍼내는 작업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계단 쪽은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데다 오염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곳은 보일러실 쪽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정화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오염토가 없을 경우에 한해 10월 중으로 환경정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사체험공간 조성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확보는커녕 설계도면조차 확정하지 못해 3년째 505보안부대 건물에 펜스만 쳐 둔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505보안부대 폐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505보안부대 건물 5개 동을 원형 복원하고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절차상 필요한 건축물대장이 군사 보안을 이유로 폐기된 터라 문제가 생겼다. 건축물대장 신규 등록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해 사적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시는 BF 인증 의무를 완화하고자 해당 건물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 했으나 지난달 24일 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부결됐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이라 문화재로서 건물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적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며 "내년 중으로 설계를 확정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나 환경정화작업, 사적지 훼손 최소화 방안 검토 등이 늦어지는 터라 아직 착공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대 남자 교수가 동료 여교수 폭행 '시끌'

## 폭행 혐의 고소 당한 후에도 또 폭행…학교측에 알렸는데 미온적 대응, 2차 피해 못 막아

### "물건 던지고 침 뱉고 욕설까지"
### 광주북부경찰 고소장 접수 수사

전남대 교수가 동료인 여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해자가 학교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학교 측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남대 철학과 소속 40대 A교수는 같은 과 50대 여 교수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A교수는 지난 8일 대학 강의실에서 B교수에게 영어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B교수는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A교수는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께 B교수 강의실로 찾아가 B교수의 목과 어깨를 잡고 주저앉힌 뒤 쓰러지자 머리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문제는 B교수가 1차 피해 사실을 학교측에 알렸는데도 미흡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B교수는 지난 13일 A교수의 폭언, 폭행 사실을 대학 본부 측에 알렸지만 대학 본부는 3일 뒤인 지난 16일 철학과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구실과 강의실을 분리하라'는 공문만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행력이 없는 학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여주기 식' 조치에 그쳤다는 것이 학교 안팎의 분석이다.

김난희 광주전남여성단체 대표는 "교수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조치를 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학 본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단순히 공문만 보내는 것은 미흡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대 철학과 관계자는 2차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인 지난 23일 전남대총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총장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총장을 찾아갔지만 총장실 비서실장은 '1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찾아오면 어떡하나'고 말하며 그냥 가라고 했다"면서 "1시간 30분 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B씨는 교수 연구실을 지난 24일부터 다른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조치조차 가해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 측의 조처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대학측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현재 완료 됐는지, 조사위원회는 언제 꾸려지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남대학교 측은 주말에 업무로 연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A교수는 8일과 20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은 한국 대학의 부패, 외국인 교수에 대한 차별, 학문적 진실성 부족과 연관된 일이다.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어용노조 허위 설립 신고' 대양판지 직원들 벌금형

허위로 어용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대양판지 직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 활동 방해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양판지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양판지 사측은 2020년 3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려 하자 청주공장과 장성공장 임직원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양판지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A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설립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단·노조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장성군수로부터 받은 노조설립신고증과 함께 제출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심문 회의에서도 설립총회를 열었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해 공익위원들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도록 했다.

대양판지 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은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 완도 선착장서 70대 노부부 차량 바다 추락 사망

완도 선착장에서 70대 노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선착장에서 1 t 트럭이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A(79)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 B(여·76)씨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선착장에는 차량 추락을 막아줄 가드레일이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가 난 트럭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 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타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9. 1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9. 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